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좌편향 왜곡 교과서 검정취소', 민주당 의원들은 '친일·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취소'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행위 지방재정 구조적 부실 질타

정무위 박대통령 공약 후퇴 맹비난

국감 현장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4일에는 예상대로 상임위 곳곳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정무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등에서는 기초연금 공약 축소, 교과서 역사 왜곡, 지방재정의 구조적 부실 등 쟁점을 놓고 국회와 정부 간, 또는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정무위원회=이날 세종시에서 처음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기초연금 축소 등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부진을 비판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질의에서 “박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중 기초연금,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행복주택 등 50개가 과기·축소됐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정부는 ‘기초연금 수정안이 국민연금을 성질하게 납부할수록 손해가 아니며 청장년 층이 현 노인 세대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고 거짓말했다”면서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또 보훈처가 “대선기간 안보교육을 이유로 특별보수단체를 호텔, 리조트 등에 초대해 베푸며 기념품을 제공하고, 야당은 종북·좌파 세력으로 불어가는 등 여론주도층에 대한 안보교육을 진행했다”며 보훈처의 2012년 대선개입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을 놓고 야당은 ‘공약파기’, 정부와 여당은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치열하게 격돌했다.

민주당 이복희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스스로 뒤집은 것일 뿐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세대간 차별을 만들어 국민간 갈등과 위파감을 촉발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안대로 시행할 경우 현행 기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교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공통 검정 기준에 따라 제대로 검정했으면 교학사 교과서는 최소 2개에서 최대 6개 심사 관점 항목에서 기준 미달로 불합격 처리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정의 구조적 부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질타했다. 지난 9월 25일 발표된 지방재정 보전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증가율은 연평균 8.1%인데 비해 지방비 증가율은 10.3%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성호 의원은 “국고보조 사업은 급증하는 반면 정부의 보조율은 해마다 감소하면서 지방비 부담만 심화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박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은 2008년 35조원에서 2013년 56조7000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국고보조율은 1991년 72%에서 2010년 63%, 올해 60%로 감소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들이댔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자자체는 예산과 관련 없이 책임만 강조되는 기적형 형태”라면서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확대를 조속히 추진해 지방 예산과 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정부는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따라 연 5조원을 지방정부에 이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전되는 재원은 1조93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지방재정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박남춘 의원은 “자자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정비,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국고보조율 재조정, 지방이양사업의 재정비 등 정부 중심의 사업 결정과 보조율 결정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교문위, 한국사 교과서 부실검정 추궁

복지위, ‘반값 기초연금’ 여야 설전

노령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노인들이 받는 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반값 기초연금’ 주장도 제기됐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A값(국민연금 기부금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 지급액을 산정하지만, 정부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지금 액을 정한다”며 “그러나 향후 물가상승률이 A값 상승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결국 실제 지급하는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지급된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4년 동안 A값 상승률이 오히려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다”며 “절대로 반값이 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중학교 교과서보다 심화된 내용을 제시해야 할 고등학교 교과서가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해 중학교 교과서보다 축소 서술한 것은 고교 교과서로서 자격을 잃은 것”이라며 즉각 검정을 취소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의 반박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지금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에는 전망되고 결국 실제 지급하는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지급된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4년 동안 A값 상승률이 오히려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다”며 “절대로 반값이 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안전행정위원회=여야는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재

정의 구조적 부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질타했다. 지난 9월 25일 발표된 지방재정 보전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증가율은 연평균 8.1%인데 비해 지방비 증가율은 10.3%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성호 의원은 “국고보조 사업은 급증하는 반면 정부의 보조율은 해마다 감소하면서 지방비 부담만 심화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박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은 2008년 35조원에서 2013년 56조7000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국고보조율은 1991년 72%에서 2010년 63%, 올해 60%로 감소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들이댔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자자체는 예산과 관련 없이 책임만 강조되는 기적형 형태”라면서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확대를 조속히 추진해 지방 예산과 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정부는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따라 연 5조원을 지방정부에 이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전되는 재원은 1조93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지방재정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박남춘 의원은 “자자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정비,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국고보조율 재조정, 지방이양사업의 재정비 등 정부 중심의 사업 결정과 보조율 결정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감 브리핑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 전남 최고” 주승용 의원

전남이 전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장인 주승용(민주당·여수을) 의원은 14일 한국교통연구원의 ‘노인 교통사고 특성 분석’ 자료를 인용, “2012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교

통사고 사망자는 전남이 56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49명), 충북(48명) 순이었고, 광주는 13위였다. 가장 낮은 곳은 서울(16명)로 14명이었다. 이는 14세 이하 아동 총과 15세 이상 64세 미만 청장년총과 비교하면 각각 11배, 5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 “노인 교통사고 특성 분석” 자료를 인용, “2012년 기준 인구 10

만명 당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전남이 56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49명), 충북(48명) 순이었고, 광주는 13위였다. 가장 낮은 곳은 서울(16명)로 14명이었다.

이는 14세 이하 아동 총과 15세 이상 64세 미만 청장년총과 비교하면 각각 11배, 5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 전남 최고” 주승용 의원

과거 문민정부부터 현 박근혜 정부까지 20여년간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등) 산하 공공기관장관 가운데 35%가 산업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광양) 의원실에 따르면 이 기간 산업부 산하 40개 기관의 기관장 252명 중 산업부 간부

업부 및 상급 기관 출신이 89명으로 35.3%에 달했다. 또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상급 기관 출신이 50명(19.8%)으로 산업부와 상급기관을 합치면 전체 기관장의 55.1%를 점했다. 특히 산업단지공단 등 산업부 산하 산업·무역분야 공공기관의 경우 10명당 7명꼴(69.2%)로 산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장 35% 산업부 출신” 우윤근 의원

과거 문민정부부터 현 박근혜 정부까지 20여년간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등) 산하 공공기관장관 가운데 35%가 산업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광양) 의원실에 따르면 이 기간 산업부 산하 40개 기관의 기관장 252명 중 산업부 간부

업부 및 상급 기관 출신이 89명으로 35.3%에 달했다. 또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상급 기관 출신이 50명(19.8%)으로 산업부와 상급기관을 합치면 전체 기관장의 55.1%를 점했다. 특히 산업단지공단 등 산업부 산하 산업·무역분야 공공기관의 경우 10명당 7명꼴(69.2%)로 산



“호남 근로장려금 지급률 전국 최고 수준” 이용섭 의원

호남지역의 2012년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률이 평균 5.9%로 전국에서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광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지급받은 근로장려금 규모는 4만2000여 가구, 333억원에 달해 전체 가구의 6.1%로 16개 시도 중 제주 다음으로 높았다.

광주지역에서는 3만여 가구가 258억원을 지급받아 전체 가구의 5.8%로 16개 시·도 중 3번째로 높았다.

“전투축구로 부상 후 전역자 5년간 2천명” 김광진 의원

군부대에서 축구를 일컫는 ‘전투축구’와 같은 운동 중 다쳐 전역한 장병사가 지난 5년간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비례) 의원이 1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2012년 축구를 비롯한 운동 중 발생한 부상으로 전역한 장병이 226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특기 교육을 포함한 훈련 중 생긴 질환으로 전역한 장병(2646명)보다는 적지만, 작업(678



“취업준비생 90% 근로계약서 작성 몰라” 주영순 의원

대학생 등 취업준비생 10명 중 9명이 서면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의무화 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주영순(비례) 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학생 등 취업준비생 89.2%가 서면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의무화 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작성 및 교부의무화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서면 작성에 대해 안내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31%, 실제로 사업주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30.9%에 각각 그쳤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

금매로 팔아야 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최대 한 빠른 시일에 ! 높은 가격에 ! 바로 처분해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매

◦ 주월동 대지 2,000㎡, 건물 2,020㎡, 수익률 10% 대출 16억5천포함, 매매가 38억. ◦ 쌍촌동 대단위아파트단지 내 대지 350㎡, 건물 996㎡ 매매가 16억. ◦ 신창동 대지 488㎡, 건물 966㎡ 매매가 15억 (공실없음)

◦ 풍암동 상업지역내 위치 좋은 신축상가 대지520㎡, 건물 3,135㎡ 대출28억 포함, 매매가 42억.

토지 매매

◦ 남구 주월동 대지 3,768㎡ 도시형생활주택, 소형빌라 신축적합 매매가 32억. ◦ 광산구 수원동 수원동지동차매단지 입구, 전 2,230㎡ 광고효과 최고. 물류센타, 타이어 적합. 매매가 15억. ◦ 회천동 동면 오동리 전, 일야. 계획관리지역 17,730㎡ 매매가 2억9천만원. ◦ 나주시 부득동 2차선 도로점 제1종보증주거지역 내 전 2,350㎡ 건축가능. 투자적합 미매가 1억9천만원 (금매 비싼 시리더로 대면해서 상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나주신 민족 보답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